

북한 인식과 온라인 통일 담론의 구조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
발화에 대한 커뮤니티 댓글 분석

장동관*

본 연구는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라는 반문형 발화에 대한 댓글을 분석하여 남한의 북한 인식과 온라인 통일 담론 구조를 규명한다. 디시인사이드·에편코리아·더쿠·뽀뿌·루리웹 등 국내 5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댓글 500건을 정량 분석하고, 100건을 질적 분석하여 의미 프레임·입장·대상·수사 전략·독성의 양상을 살폈다. 코드북 기반 코딩, 통계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 변수’·‘경제/비용’·‘정체성/주권’이 상위 프레임을 이루었으며, ‘국내 정치’ 프레임의 독성이 가장 높고 모델·절차·제도를 중시하는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가장 낮았다. 질적 분석에서는 ‘우리/우리 땅’ 소유격과 추방 명령형이 결합한 일상적 안보화, 비용 담론의 양방향 작동, 커뮤니티별 에코 챔버와 토론 규범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통일 담론이 개발-민족-안보의 문법 속에서 조직되며, 거버넌스·탈안보화 프레임이 댓글 공간의 독성을 완충할 잠재적 경로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통일 교육·정책 설계에서 경제·정체성·안보 프레임과 더불어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북한 인식, 통일 담론, 온라인 커뮤니티, 의미 프레임, 안보화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한반도 통일 담론은 더 이상 정부 문서나 전문가 토론에 한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통일을 둘러싼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논의의 초점은 외교·안보, 경제·비용, 주권·정체성, 윤리·인권 등 여러 층위로 분화되어 있다. 특히 “통일이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것이냐?”와 같은 반문형 발화가 제기되는 순간, 영토 문제·외부 위협·집단 정체성의 이슈가 한꺼번에 호출되면서 댓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정동이 격화되는 논쟁 국면이 나타난다. 이 반문은 한국계 미국인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강(David Kang)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개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가정형 질문을 담은 영상 캡처를 출처로 하며, 2020년 이후 루리웹·FM코리아·디시인사이드·뽐뿌·더쿠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교수가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류의 제목으로 반복 인용되며 밈처럼 소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문형 발화가 촉발한 댓글 담론을 대상으로, 의미 프레임과 입장, 공격 대상, 수사 전략, 독성이 어떤 규칙에 따라 결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남한 이용자들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온라인 통일 담론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것이냐?’라는 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댓글에 나타나는 의미 프레임(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우세 양상을 파악한다. 둘째, 이러한 의미 프레임이 통일에 대한 입장(찬성/반대/조건부/미상), 공격 대상(외부/국내/북한 정권/북한 주민/미상), 수사 전략(모욕·비하·숫자·근거 제시/질문·탐색·권위 호소/풍자·밈·폭력·처벌 요

구)과 어떠한 결합 패턴을 이루는지 교차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댓글의 독성(toxicity) —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친 표현의 정도 — 이 이러한 결합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정책 엘리트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통일 담론 연구를 보완하고, 일상 언어 수준에서 감정 동원과 적대 구성의 과정을 정량분석과 질적 해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은 두 지점에서 출발한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통일 논쟁은 일상적 민족주의(일상적 실천과 언어 습관 속에서 ‘우리’를 상시적으로 호출하는 장치)와 안보화(쟁점을 안전과 위협의 틀로 재정의하여 비상사안으로 호명하는 실천)의 논리에 의해 쉽게 점화·증폭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비교·계량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둘째, 통일이 발전주의 프레임(경제성장·근대화와의 연계) 속에서 논의될 때, 경제적 비용·편익 계산과 주권·정체성에 대한 도덕적 주장이 어떻게 상이한 결론으로 분기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플랫폼 문화와 디지털 정동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미시 단위 텍스트(댓글) 분석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발전주의, 일상적 민족주의, 안보화의 세 관점을 주요 분석 도구로 삼아, ‘개발-민족-안보’라는 세 축이 댓글 담론에서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 정당화되는지를 살핀다.

이 목적과 배경에 따라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라는 반문형 발화가 제기된 논쟁 국면에서 어떤 의미 프레임이 우세하며, 그것이 이 입장·대상·수사 전략과 어떠한 기본 결합을 이루는가? 둘째, 댓글 담론의 패턴을 설명할 때 일상적 민족주의와 안보화 이론, 발전주의, 각 온라인 커뮤니티의 플랫폼·맥락 요인 가운데 어떻게 결합하여 댓글

글 담론을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탈발전주의 및 비경제·공존 프레임 등 대안적 담론 조합은 안보화·배제 담론에 균열을 내며 통일 담론의 다양성을 실제로 확장하는가?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방문자 규모가 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다섯 곳(디시인사이드, 에phem코리아, 더쿠, 뽐뿌, 루리웹)에서 “재미 교수가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라고 반문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달린 공개 댓글만을 수집하였다. 1단계에서는 커뮤니티별 100개씩, 총 500개 댓글을 대상으로 의미 프레임·입장·대상·수사 전략을 코딩하고 독성 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통계와 교차표 분석을 통해 전체 분포와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별 20개씩, 총 100개 댓글을 층화화 무작위로 추출하여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질적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

일상적 민족주의는 마이클 빌리그(Michael Billig)가 제시한 개념으로, 전쟁·혁명기에 표면화되는 격렬한 ‘뜨거운’ 민족주의와 달리, 일상의 습속과 상징을 통해 국민 정체성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재생산되는 현상을 뜻한다.¹⁾ 빌리그는 신문·방송·일상 언어 속에서 무의식적으

1)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London: SAGE, 1995), p.6.

로 수행되는 국가 표지를 “일상적 국기 게양(flagging)”이라 부르며, 이러한 반복적 지시가 자국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고 설명한다.²⁾ 예컨대 국기와 국가(國歌), 우표·화폐의 문양, 뉴스 보도의 “우리나라”라는 호명은 대개 인지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국가를 자연스럽게 전제하게 만든다.³⁾

한반도 맥락에서 이 이론은 통일 담론을 해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남한은 분단 체제 속에서 독자적 국민국가 정체성을 구축해 왔지만, 동시에 “하나의 한민족”이라는 표상을 일상적으로 표출해 왔다.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서술, 올림픽 공동입장, 한반도기의 사용, 국제무대에서 ‘코리아’라는 통칭을 전면화하는 사례들은 분단의 현실과 무관하게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체로서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일상적 국기 게양의 사례로 읽을 수 있다.⁴⁾ 또한 통일 담론은 어휘 선택과 호명의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문·방송의 기사 구성(‘국내/국제’ 면의 분리), 정치인의 연설에서 반복되는 “우리 민족·한겨레”와 같은 호칭, 기념일 행사에서 동원되는 상징은 일상적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미리 설정한다. 남한 담론에서 북한 주민을 “동포”, 북한 지역을 “북녘”으로 호명하는 관행에는 민족공동체적 통일을 은연중에 당연시하는 전제의 형식이 숨겨져 있다. 이는 통일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로 전제하게 만드는 담론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빌리그가 강조하듯, ‘we/our, this, here’와 같은 작은 지시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여기(here)’와 ‘지금(now)’를 국가적 좌표로 고

2) *Ibid*, pp.6~9.

3) *Ibid*, pp.41~43.

4) *Ibid*, pp.118~121.

정시키며, 국토·국민·국가의 동일시를 습관화한다.⁵⁾ 닷글과 같은 일상적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우리”, “동포”와 같은 표현은 사용자의 의식적 성찰을 거치지 않은 채 민족 정체성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일상적 민족주의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상상력의 ‘배경장치’로 기능하며, 통일을 당위로 만드는 자연화의 메커니즘과 그에 대한 균열의 징후를 동시에 포착하게 할 수 있다.

2)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

안보화 이론은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가 정립한 개념으로, 특정 사안이 담론적 실천을 통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전통적 관점이 군사적 위협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안보 개념을 한정했다면, 안보화 이론은 ‘무엇이 위협인가’를 객관적 실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임을 전제한다. 즉, 정치 행위자(국가 엘리트나 지도자)가 어떤 사안을 ‘존재적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규정하고 청중에게 긴급 대응을 호소하는 언표 행위(speech act)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안을 일상 정치가 아닌 예외적 안보 영역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을 안보화 시도(securitizing move)라 하며, 청중(국민이나 국제사회 등)이 그 위협 규정을 수용하여 비상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안보화가 성립한다.⁶⁾

안보화 이론을 통일 담론에 적용하면, 남북관계·통일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안보로 구성되어 정책 결정과 대중 심리에 어떤 효과를 낳

5) *Ibid*, pp.94~95, 117~119.

6)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33.

는지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라는 반문은 통일을 외세 개입의 위협으로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과제로 제시하는 전형적 안보화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⁷⁾ 실제로 한반도 통일 담론에서는 냉전 시기 반공 담론, 최근 북핵 문제의 지속적 부상 등의 결합을 통해 통일 논의가 위협 인식의 틀로 연결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담론이 안보화되면 통일은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 과제나 위협 관리 대상으로 연결된다.

한편 탈안보화(desecuritization)는 사안을 ‘존재적 위협’으로 불러내는 안보의 문법을 넘어 사안을 정상 정치의 규칙(논거 경쟁, 절차·제도의 설계, 상호 조정)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⁸⁾ 이는 프레임 전환(‘존재적 위협’의 언어를 거버넌스·절차·모델의 언어로 수정), 행위자·공론장의 이동(의회·지방·시민사회로 논의의 중심을 이동), 제도화와 일상화(법률·예산·행정 절차 안에서 논쟁을 재정치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 틀에서 보면 반문형 발화가 촉발한 담론은 안보화의 경로와 탈안보화의 경로로 진행될 수 있다. 안보화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의 위협을 강조하여 동원과 예외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탈안보화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통합과 거버넌스의 문제로 재설정하여 통일의 모델 설정, 치안, 사법, 재정 분담과 같은 절차 설계가 토론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때 논쟁은 ‘누가 적인가’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비용·권리 구조로 할 것인가”로 이동할 수 있다.

7) *Ibid*, pp.23~24.

8) *Ibid*, p.29.

3) 발전주의 담론(Development Discourse)

전후 개발 담론은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모든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목표로 상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성장 지표(GDP, 산업화 수준 등)를 국가 간 위계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⁹⁾ 이러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담론은 특정한 역사·사회적 조건에서 형성된 서구식 근대화 모델을 ‘정상 경로’로 설정하고, 다른 지역을 그 경로 위에 배치해야 할 존재로 상상한다.¹⁰⁾ 에스코바(Escobar)와 리스트(Rist)는 개발 담론이 중립적인 기술 언어가 아니라, 선진국이 타 지역을 ‘미개발’로 규정하고 자신의 발전 경로를 보편 규범으로 강요하는 권력-지식 체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개발은 곧 삶의 개선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정치 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는 장치라는 것이다.¹¹⁾

한반도 통일 논의 역시 오랫동안 이러한 발전주의의 언어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통일을 북한의 산업화·시장화, 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 한반도 전체의 성장 잠재력 확대와 연결하는 논의는 ‘통일은 성장의 마지막 기회’, ‘통일 한국은 G2에 근접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반복되어 왔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은 이러한 발전주의 통일 담론의 전형으로, 통일을 거대한 경제적 이득의 원천, 국가 단위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 상상하는 방식을 응축하

9) Michael E. Latham,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p.50.

10) Philip McMichae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6th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16), pp.3~4.

11) Gilbert Rist,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5th ed. (London: Zed Books/Bloomsbury, 2019).

고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 통일 담론은 댓글 수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번역된다. 통일을 둘러싼 비용·편익 계산, 세대·계층 간 부담과 이익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논쟁, “세금폭탄”, “2030은 이득 못 보고 세금만 낸다”는 표현 등은 통일을 ‘손익이 분명한 투자 결정’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한편에서는 “어차피 돈은 들 텐데 우리가 주도권과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용을 감당 가능한 투자로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효과는 없고 부담만 크다”는 주장을 통해 통일 추진을 유보·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비용 프레임은 이처럼 발전주의 통일 담론이 제시한 경제·투자 상상력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상력에 대한 피로·불신·냉소를 표출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탈발전주의(post-development) 관점은 이러한 발전주의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탈발전주의 논의는 개발을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중립적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정치 질서를 확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보고, “개발의 대안(alternative development)”이 아니라 “개발로부터의 대안(alternatives to development)”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¹²⁾ 이 관점에서 보면, 통일을 성장률·투자 규모·인프라 확충 지표로만 환원하는 담론은 북한을 ‘낙후된 개발 대상’으로, 남한을 ‘지도·관리 주체’로 재구성하며, 통일을 둘러싼 다른 상상 가능성 — 북한 주민의 주체성, 생태·지속가능성, 삶의 질, 관계적 평화 등 — 을 배경으로 밀어낸다.

12) Arturo Escobar, *The Third World*(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pp.215~216.

4)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문화, 디지털 정동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이라기보다, 플랫폼 규범·밈·정동이 중첩되는 상호작용 공간이다.¹³⁾ 특정 사이트의 기술적 구조(게시판·대댓글·익명성·추천/비추천 버튼 등)와 운영 규칙(욕설 필터링, 제재 수준, 신고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미리 규정한다. 동시에 각 커뮤니티에 축적된 하위문화(유머 코드, 금지어, 줄임말, 밈, 정치적 성향)는 무엇이 ‘웃기고’, ‘선 넘는’ 말이며, 어디까지가 ‘공감되는’ 표현인지를 비공식 규범으로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밈글은 개인 의견의 단순 합이 아니라, 플랫폼 장치와 문화가 전체하는 말하기의 조건 위에서 성립하는 산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플랫폼 문화는 담론의 구조적 편향과 에코 챔버 효과를 낳기 쉽다.¹⁴⁾ 남초/여초로 알려진 커뮤니티,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는 이용자 구성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며, 이 동질성은 상반된 의견을 초기 단계에서 조롱·비난·비추 누적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추천·비추천, ‘좋아요’와 같은 참여 지표는 개별 밈글의 가시성과 생명력을 좌우하는데, 이는 다시 이

13) Tarleton Gillespie, “The Politics of ‘Platforms’,” *New Media & Society*, Vol.12, No.3(2010), p.348; José van Dijck, *The Culture of Connectivity: A Critical History of Social Media*(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5.

14) Cass R. Sunstein,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p.19; Elanor Colleoni, Alessandro Rozza and Adam Arvidsson,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4, No.2(2014), p.318.

용자들이 다수의 정서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침묵하거나 내부 농담과 밈의 형태로만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다수의 정서를 거스르는 발언은 ‘눈치 없는 말’, ‘분위기 파괴’로 규정되기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문화는 특정 방향의 프레임과 정서를 증폭시키는 정동적 여과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익명성·가명성 역시 댓글의 정동과 독성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명 기반 SNS에 비해, 포럼형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성과 높은 회전율을 전제로 한다. 닉네임이 고정된 경우에도 이용자 간 실제 관계는 느슨하기 때문에, 강한 욕설·비하 표현을 사용해도 일상적 관계망에서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공격적인 표현의 심리적 비용을 줄이고, 정동적 과잉(분노·멸시·조롱)을 일상적인 소통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요인이 된다.¹⁵⁾ 동시에 이러한 공격성은 집단 내부에서는 “솔직함”이나 “사이다 발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여, 독성 높은 발화를 보상하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한다.

디지털 미디어 연구는 이러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디지털 정동(digital affects)’의 관점에서 해석한다.¹⁶⁾ 정동은 개인 내부의 감정 상태라기보다, 텍스트·이미지·밈·이모티콘을 타고 흐르며 사람들 사이를 순환하는 집단적 분위기와 강도를 가리킨다. 특정 이슈에 대한 댓글

15) John Suler,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7, No. 3(2004), p. 321; 김한민·김기문, “온라인 게시판에서 익명성과 악성댓글 사이의 관계 연구: 합리화와 도덕성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6호(2018), 1098쪽.

16) Zizi Papacharissi, “Affective Publics and Structures of Storytelling: Sentiment, Events and Medial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19, No. 3(2016), p. 308.

글이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달릴 때, 그 속에서 오가는 것은 논리적 주장 못지않게 ‘빠침’, ‘허탈함’, ‘웃김’, ‘피곤함’ 같은 정동의 흐름이다. 플랫폼 구조는 이 정동이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번질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추천 수가 많은 상위 댓글이 분노와 조롱의 어조를 가질 경우, 이후 댓글들은 그 정조를 따라 가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통계·근거를 제시하면서도 비교적 차분한 상위 댓글이 자리 잡으면, 이후 논의가 일정 부분 “설명·비판·질문”의 규범을 따라 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플랫폼 규범·밈·정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은 통일 담론이 ‘무(無)에서 생성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특정 말하기 방식이 보상·억압되는 환경에서 생산·유통되는 담론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디시인사이드, 에phem코리아, 더쿠, 뽀뿌, 루리웹 역시 각기 다른 플랫폼 문화와 정동 구조를 지니며, 이는 동일한 자극 발화에 대한 의미 프레임 분포, 찬반 입장, 공격 대상, 수사 전략, 독성 수준의 차이로 드러난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통일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민족·안보라는 내용적 프레임 뿐 아니라, 플랫폼 문화와 디지털 정동이 담론의 강도·방향·독성을 형성하는 매개 구조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일상적 민족주의와 안보화 이론을 핵심 분석 틀로 삼되, 발전주의/탈발전주의 논의는 비용 프레임의 양가성을 해석하는 보조 렌즈, 플랫폼·디지털 정동 논의는 커뮤니티 간 차이를 설명하는 맥락 이론으로 활용한다.

3.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다섯 곳에서,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라고 반문하는 발언을 인용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였다. 해당 발언은 최근 국내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재인용되면서 통일 문제를 외세 개입과 영토 주권의 문제로 동시에 소환하는 반문형 구문으로 널리 회자되었다. 다시 말해, 분석 대상 댓글은 ‘백지 상태의 통일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기보다, 이미 외부 행위자의 개입과 ‘우리 땅’의 소유권을 결합한 안보화된 프레임을 전제로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 담론 일반이라기보다 이러한 반문형 발화가 촉발한 논쟁 국면에서의 의미 프레임 결합 규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선정은 2025년 7월 Total Visits 지표와 2025년 8월 와플보드(전월 방문 기준) 순위를 교차 검증하여 최근 1년간 방문 규모가 큰 5개 사이트(디시인사이드, 에펠킨리아, 더쿠, 뽀뿌, 루리웹)를 선정하였다. 디시인사이드는 익명 게시판 중심의 대형 커뮤니티, 에펠킨리아는 남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스포츠·게임 커뮤니티, 더쿠는 여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연예·문화 커뮤니티, 뽀뿌는 소비·시사 정보 중심 커뮤니티, 루리웹은 게임·서브컬처 중심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¹⁷⁾

17) 이러한 플랫폼별 소개는 선행연구와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일반적인 이미지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이용자 구성이나 전체 담론 지형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인

이러한 플랫폼별 특성은 각 커뮤니티에서 통일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정동과 수사 전략이 보상·억제되는지를 해석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정량분석을 위해 커뮤니티별 댓글을 100개씩, 총 500개의 댓글을 샘플링 규칙에 따라 선정하였다. 커뮤니티별 독성 점수를 삼 분위로 나눠 저·중·고 강도를 부여하고, B1~B6(의미 프레임)로 라벨링하였다. 교차코드 S(입장), T(타깃), R(수사), F(프레임)는 간단 규칙으로 부가했다. 샘플링은 먼저 24개의 분류에서 가능하면 각 1건씩 선발한 뒤, 남은 표본을 강도(3)×대분류(6)의 18칸에 균등 배분하되 자료 부족 칸은 다량 칸에 비례 재분배하고, 칸 내 후보는 무작위 추출했다(중복·스팸·비한국어 제외). 각 커뮤니티 100개씩 총 500개를 확정하였다. 이어 질적 분석에서는 총 100개의 댓글을 사용하였다. 5개의 커뮤니티에서 각 20개씩을 무작위 추출하되, 각 커뮤니티의 20개 표본 내부에서 댓글 위치(스레드 초반/중반/후반 = 7/6/7개), 발화 강도(약함/보통/강함 = 6/6/8개), 주제 배분(경제 5, 정채성·주권 7, 대외 변수 5, 기타 3)이 되도록 균형을 맞추었다.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욕, 명령형, 질문·수치(숫자) 제시 유형을 전체 표본에서 각각 최소 4건 이상 확보하였고, 입장(찬성·반대·조건부·중립)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유사한 비율로 맞추었다. 윤리적 고려 차원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공개 게시물의 댓글만 사용하였으며, 커뮤니티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별 표본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최종 수집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당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된 댓글은 평균 약 30자의 한글 텍스트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찬반 입장과 정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2) 독성 계량: Perspective API 활용

수집한 댓글의 독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oogle Jigsaw의 Perspective API를 활용하였다. Perspective API는 텍스트의 유해성(toxicity)을 기계학습 모델로 판단하여 0에서 1 사이의 확률 점수로 산출한다. 본 연구는 댓글에서 핵심 속성인 TOXICITY(일반 악성), SEVERE_TOXICITY(심각한 악성), IDENTITY_ATTACK(정체성 공격)을 산출하였다. 주된 지표는 TOXICITY로 하되, 다른 지표는 보조적으로 참고했다. 독성은 3등급으로 나누어 전체 분포 삼분위에 근거하여 Low/Mid/High로 나누었다. 본 데이터의 분포에서는 대략 0.1 미만 = Low, 0.1~0.4 = Mid, 0.4 초과 = High로 운용하였다(정확한 절단값은 데이터 분포에 따라 조정). 등급화 결과는 댓글의 분류, 프레임별 상관분석과 커뮤니티별 비교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3) 프레임 코딩 및 코드북

댓글에 내포된 의미상의 프레임과 표현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예비 관찰에 근거하여 자체 코드북을 구축해 네 가지 차원으로 코딩하였다. 본 코드북은 통일 담론에서 주로 나타나는 내용 유형과 의사소통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첫째, 입장(Stance, S) 코드는 통일에 대한 작성자의 기본 태도를 찬성(통일 적극 지지), 반대(통일 불필요/반대), 조건부(특정 조건 아래 통일

찬성), 미상(입장 불분명)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통일은 꼭 해야 한다’는 찬성, ‘통일하면 경제 망한다’는 반대, ‘지금은 통일할 때가 아니다’는 반대, “통일 별로라 생각했는데 외세가 저럴 거면 해야지”와 같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조건부로 코딩하였다.

둘째, 대상(Target, T)은 비판과 지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외부(외국 정부·외집단), 국내 집단(대한민국 내 특정 집단/인물), 북한정권·북한주민,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짱×(중국인)랑 쪽××(일본인)는 꺼져라’라는 댓글은 대상이 명백히 외부(중국/일본)이며, ‘매국노 ××들’은 국내집단(통일 반대를 비난하는 국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코딩은 댓글이 어느 집단을 겨냥해 적대감을 표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셋째, 수사(수단)적 전략(Rhetoric, R)은 주장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 또는 수사 장치를 코딩하였다. 분류는 ㉠ 모욕·비하(욕설·경멸적 호칭), ㉡ 수치·근거 제시(통계·사실 인용, 합리적 호소), ㉢ 질문·탐색(반문·추가 정보 요구), ㉣ 권위 호소(역사·권위 인용), ㉤ 풍자·밈, ㉥ 폭력·처벌 호소(물리적 제거나 처벌 촉구), ㉦ 미상으로 나누었다.

넷째, 프레임(Frame, F)은 통일 담론을 해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4가지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 진단 프레임은 현 상황의 문제 지적·원인 규명(예: 비용·혼란, 북한 정권 문제), ㉡ 예측 프레임은 결과·시나리오 전망(예: “통일하면 우리가 다 떠난다”, “통일 안 하면 외세가 북한을 차지한다”), ㉢ 동원 프레임은 행동 촉구·감정적 동원(예: “우리가 나서서 통일을 쟁취하자/저지하자”), ㉣ 미상은 어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코딩하였다. 이는 벤포드와 스노(2000)의 ‘진단-처방-동원’ 프레임 개념에서 가져온 것으로, 댓글이 통일을 어떠한 이야기 구조로 바라보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⁸⁾

〈표 1〉 통일 담론 댓글 분석을 위한 코드북

코딩 항목	정의	주요 분류/값
입장 (Stance, S)	댓글 작성자가 통일에 대해 보이는 기본 태도	찬성(통일 적극 지지), 반대(통일 불필요/반대), 조건부(특정 조건하 찬성), 미상(불분명)
대상 (Target, T)	댓글이 비판·지목하는 대상 집단	외부(외국 정부·외집단), 국내 집단(대한민국 내 특정 집단/인물), 북한정권, 북한주민, 미상
수사(수단)적 전략 (Rhetoric, R)	주장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장치	모욕·비하(욕설·경멸), 수치·근거 제시(통계·사실), 질문·탐색(반문·정보 요구), 권위 호소(역사·권위 인용), 풍자·밈(유머·패러디), 폭력·처벌 호소, 미상
프레임 (Frame, F)	통일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 이야기 구조	진단(문제·원인 규명), 예측(미래 전망·시나리오), 동원(행동 촉구), 미상

위와 같은 코딩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불일치하는 코딩에 대해 합의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댓글에는 예를 들어 S = 반대, T = 외부, R = 모욕·비하, F = 동원 등의 코드 조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레임 코딩을 통해, 어떤 유형의 댓글이 더 독설적이며, 어떠한 의미 틀이 독성 발화와 연결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4) 자료 분석

정량분석은 커뮤니티별 독성 분포 비교와 프레임별 독성 분석으로

-
- 18) David A. Snow, and Robert D. Benford,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 Bert Klanderman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1 (Greenwich, CT: JAI Press, 2000).

이루어졌다. 커뮤니티별로 평균 독성 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른 독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프레임 유형(진단/예측/동원)별로 평균 독성 점수를 비교하고, 입장(Stance)과 대상(Target)에 따른 독성 경향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필요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이나 분산분석(ANOVA) 등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정성 분석 측면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CDA)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댓글의 표현구조, 어휘 선택, 담화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van Dijk(2008)의 사회인지적 접근(Socio-cognitive approach)에 따라, 담론 속에 내포된 사회적 인지(공유된 지식, 신념,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댓글 작성자가 어떠한 인지적 도식을 갖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것이 언어에 어떻게 배어 있는지를 살폈다.

4. 분석결과

1) 프레임 및 소분류 결과

수집한 댓글에서는 통일 담론에 대해 6개의 의미 프레임이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비용, 정체성/주권, 대외 변수, 인간/윤리, 국내 정치, 통합/거버넌스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비용’ 프레임은 통일을 재정과 자원 배분의 경제적 문제로 환원하여 세금, 인프라, 노동시장 지표를 정당화 근거로 전면화한다. 보통 “세금폭탄”, “인프라 깔 돈이 없다”, “통일하면 일자리 줄어든다”와 같은 표현이 제시되며, 통일의 당위보

다는 비용을 피하려는 위험 프레임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동일한 자원을 언급하더라도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나 제도의 설계를 다루는 경우는 통합/거버넌스에 재분류하였다.

‘정체성/주권’ 프레임은 통일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며 헌법, 주권, 영토, 민족/동포의 언어를 활용한다. “북한은 원래 우리 영토”, “헌법에 통일 지향이 있다”, “같은 민족이라 하나가 되어야” 같은 내용은 통일을 법적이고 역사적인 연속성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국가 정체성의 단일성과 영토적 완결성을 근거로 삼는다. 한편 안보와 군사력이 논증의 중심인 경우 영토, 안보의 축이 나타나지만 논의의 중심이 외교적 세력 관계를 다룰 경우 ‘대외 변수’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정체성/주권’ 프레임은 ‘누가 우리인가’의 경계를 재확정하며, 헌법·영토·역사의 언어로 통일의 법적·상징적 연속성을 주장한다.

‘대외 변수’ 프레임은 통일을 국제정치 환경 아래에서 다루며 외부 행위자 — 중국·미국·러시아·일본·UN — 의 역할을 결정적인 변수로 상정한다. “중국이 개입하면 위험하다”, “한미동맹이 핵심 변수”, “UN 제재가 걸림돌”과 같은 댕글은 당위나 비용 계산보다 외부 구조의 제약과 기회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외부 비판이 드러나더라도 실제 논의의 중심이 남남 갈등이나 책임 공방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로 옮겨서 코딩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이나 외부 관리 차원에서 통일을 다루는 경우는 ‘통합/거버넌스’로 재배치하였다.

‘인간/윤리’ 프레임은 통일을 사람과 삶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제도나 비용보다 주민의 권리와 생존을 부각하여 공감과 돌봄의 경로를 구상한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계, 일상적 고통, 탈북·이주 경험 같은 미시적 서사가 주된 근거로 작용하며 때로는 풍자를 통해 윤리적 감수성에 호소한다. “주민 인권부터 챙겨야”, “생활이 이렇

게 어려운데 …”와 같은 진술은 통일 담론의 도덕적 기준과 돌봄의 책무를 중심에 둔다. 다만 주민을 주로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화할 경우 ‘경제/비용’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논리를 주도할 경우 ‘정체성/주권’ 혹은 ‘국내 정치’로 경계를 조정하였다.

‘국내 정치’ 프레임은 통일 담론의 초점을 남한 내부의 진영, 세대, 엘리트 갈등으로 이동시켜 책임을 귀속시키고 프레임 경쟁을 생산하였다. 좌/우, 종북/극우, 20대/5060, 언론·정치인·관료·재벌 등 내부 타자화의 언표가 빈번하며, “이건 좌우 싸움일 뿐”, “요즘 20대가 문제”, “언론/정치인/관료 탓”과 같은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 프레임은 정책이나 설득의 논리보다는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데 효과를 집중하기 때문에 대안 설계나 국제 변수의 분석이 나타나지 않는 한 ‘통합/거버넌스’·‘대외 변수’와 명확히 구분된다. 즉, ‘국내 정치’는 통일 담론을 ‘누가 옳은가’의 구도로 조직한다.

마지막으로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모델, 절차, 제도를 구체화하고 통일의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 정당화로 제시한다. 주로 연합·연방·흡수·단계 통합의 모델 제시, 과도정부의 설치와 치안·사법 운영, 자원 배분과 분권 구조, 행정·조직 개편, UN 또는 신탁관리의 역할 등 구체적 절차와 제도 구상이 논리의 중심을 이룬다. 덧붙여 “연방제로 단계적 통합”, “과도정부로 치안부터”, “재정분권·거버넌스 개편”, “UN 관리안 검토”와 같은 제안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절차가 나타나는 순간 다른 주제(비용, 대외, 정체성)를 포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통합/거버넌스’로 분류하는 규칙을 적용했다. 이는 실행 가능성의 언어가 정책 담론에서 갖는 독자적 위상을 반영하였다.

2) 정량적 분석

(1) 프레임 및 소분류 분포

프레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대외 변수’가 25.7%로 가장 높았고, ‘경제/비용’이 24.3%로 뒤를 이었다. ‘정체성/주권’도 20.9%를 차지하여, 상위 세 프레임이 합계 70.9%로 전체의 약 70%를 구성하였다. 반면 ‘통합/거버넌스’와 ‘국내 정치’는 각각 13.9%, 12.5% 수준이었으며, ‘인간/윤리’는 2.7%에 그쳐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결과는 댓글 담론에서 경제적 비용, 정체성/주권, 대외 요인이 주요 논의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프레임 분포

프레임	빈도	비율 (%)
경제/비용	107	24.3
정체성/주권	92	20.9
대외 변수	113	25.7
인간/윤리	12	2.7
국내 정치	55	12.5
통합/거버넌스	61	13.9
합계	440 (미상/결측/중복 60건)	100.0

(2) 프레임과 전략의 교차 분석

프레임별로 찬반 입장(S), 공격 대상(T), 수사 전략(R)의 분포를 교차 분석한 결과, 각 변수 간에 뚜렷한 연관성 차이를 보였다. 우선 프레임과 찬반 입장의 교차분포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chi^2=142.59$, $df=15$, $p<.001$, Cramér's $V=0.329$). 특히 ‘경제/

비용’ 프레임에서는 반대 입장이 과도하게 나타난 반면, ‘정체성/주권’ 프레임에서는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조건부 찬성 비율이 다른 프레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외 변수’와 ‘국내 정치’ 프레임의 경우에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미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으로 프레임과 공격 대상 간에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chi^2=327.81$, $df=20$, $p<.001$, Cramér's $V=0.432$). 프레임의 유형에 따라 댓글이 지목하는 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국내 정치 프레임-국내 집단, 대외 변수 프레임-외부 집단). 특이한 점은 ‘정체성/주권’ 프레임과 ‘인간/윤리’ 프레임이었다. ‘정체성/주권’ 프레임에서는 외부 집단을 향한 언급이 69.6%로 높게 나타나, 대외적인 행위자를 겨냥한 담론으로 과대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간/윤리’ 프레임은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 비중이 58.3%로 가장 높아,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에서는 북한 정권을 향한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았고(24.6%), ‘경제/비용’ 프레임은 국내 집단(51.4%)과 북한 주민(18.7%) 대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표 3〉 프레임별 찬반 입장 분포(빈도 및 백분율)

프레임	찬성	조건부	반대	미상
경제/비용	37 (34.6%)	7 (6.5%)	46 (43.0%)	17 (15.9%)
정체성/주권	69 (75.0%)	4 (4.3%)	5 (5.4%)	14 (15.2%)
대외 변수	38 (33.6%)	11 (9.7%)	19 (16.8%)	45 (39.8%)
인간/윤리	4 (33.3%)	0 (0.0%)	3 (25.0%)	5 (41.7%)
국내 정치	14 (25.5%)	0 (0.0%)	11 (20.0%)	30 (54.5%)
통합/거버넌스	16 (26.2%)	19 (31.1%)	12 (19.7%)	14 (23.0%)
합계	178 (40.5%)	41 (9.3%)	96 (21.8%)	125 (28.4%)

〈표 4〉 프레임별 공격 대상 분포(빈도 및 백분율)

프레임	국내 집단	북한 정권	북한주민	외부	미상
경제/비용	55 (51.4%)	4 (3.7%)	20 (18.7%)	22 (20.6%)	6 (5.6%)
정체성/주권	13 (14.1%)	10 (10.9%)	3 (3.3%)	64 (69.6%)	2 (2.2%)
대외 변수	8 (7.1%)	1 (0.9%)	0 (0.0%)	104 (92.0%)	0 (0.0%)
인간/윤리	2 (16.7%)	1 (8.3%)	7 (58.3%)	1 (8.3%)	1 (8.3%)
국내 정치	52 (94.5%)	2 (3.6%)	1 (1.8%)	0 (0.0%)	0 (0.0%)
통합/거버넌스	19 (31.1%)	15 (24.6%)	10 (16.4%)	13 (21.3%)	4 (6.6%)
합계	149 (33.9%)	33 (7.5%)	41 (9.3%)	204 (46.4%)	13 (3.0%)

외부 대상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프레임에 따라 담론이 지목하는 적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4〉).

끝으로 프레임과 수사 전략의 교차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89.74$, $df=25$, $p<.001$). 다만 Cramér's V 값은 0.202로 앞의 두 변수에 비해 연관성의 강도는 약한 수준이었다. 두 드러진 연결성을 보면 ‘국내 정치’ 프레임은 모욕과 비하의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약 51%), 객관적 수치 및 근거 제시나 질문, 탐색과 같은 전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경제/비용’ 프레임과 ‘인간/윤리’ 프레임에서는 이성적인 주장이 두드러져 수치와 근거에 기반하여 각각 댓글의 61.7%, 75.0%가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를 보였다. ‘정체성/주권’ 프레임은 타 유형에 비해 권위에 호소하는 수사 전략(애국심, 원칙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대외 변수’ 프레임에서는 풍자·밈 활용 비중이 높아(18.6%) 국제사회나 외부 요인을 비꼬는 방식이 돋보였다. 한편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이나 과격한 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다른 프레임에 비해 중립적인 논조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3) 프레임별 독성 수치 비교

마지막으로, 댓글의 독성 정도도 프레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댓글에 Perspective API로 0~1 범위의 독성 점수를 부여하고 Welch의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프레임에 따른 평균 독성 수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Welch ANOVA: $F(5, 93.57) = 4.873$, $p < .001$; <표 5>).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정치’ 프레임의 댓글의 독성이 평균 0.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비용’ 프레임과 ‘통합/거버넌스’는 각각 0.212, 0.168로 낮게 나타났다(<표 6>).

사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정치’의 독성 수준은 ‘경제/비용’, ‘정체성/주권’ 등 여러 프레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예: ‘국내 정치’ > ‘경제/비용’의 t 검정 $p < 0.01$; ‘국내 정치’ > ‘통합/거버넌스’ $p < .001$). 반면 ‘통합/거버넌스’의 독성 수준은 ‘정체성/주권’, ‘대외 변수’, ‘국내 정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모두 $p < 0.05$). 요약하면, ‘국내 정치’에서는 독설과 공격성

<표 5> 프레임에 따른 댓글 독성 점수 Welch ANOVA 결과(독립변수: 프레임)

요인	$F(df_1, df_2)$	p
프레임	4.873 (5, 93.57)	< .001

<표 6> 프레임별 평균 독성 점수 및 95% 신뢰구간(Perspective API 기준)

프레임	평균 독성 점수	95% 신뢰구간
경제/비용	0.212	0.170–0.254
정체성/주권	0.251	0.205–0.297
대외 변수	0.284	0.240–0.327
인간/윤리	0.263	0.168–0.358
국내 정치	0.353	0.281–0.425
통합/거버넌스	0.168	0.122–0.213

이 가장 두드러진 반면, ‘통합/거버넌스’에서는 비교적 정제된 언어가 사용되며, ‘정체성/주권’·‘대외 변수’·‘인간/윤리’는 서로 유사한 중간 대에 위치한다.

3) 정성적 분석

(1) 공통 주제

무엇보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반도=우리 땅’이라는 영토 주권의 절대화와 그에 결박된 배타적 정체성이다. 많은 댓글들이 외부 행위자의 관여 가능성 자체를 불법, 부당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우리땅” 같은 소유격과 “여기/지금”의 지시어를 댓글에 담았다. 빌리그가 말한 ‘일상적 국기 게양(flagging)’ — 평시의 언어 습속을 통해 국가적 ‘여기/지금’을 상시 상기시키는 행위 — 이 반복될수록 경계의 감정은 강해지고, 타자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 꺼져 ××, 남의 땅 가지고 뭘 짓이냐”, “지들이 뭘데 우리나라를 분할하네 마네” 같은 댓글은 소유자와 침입자를 ‘우리/남’으로 가르는 선 긋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언표는 자기 집단을 강화하고(‘우리 땅’) 타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꺼져”, “지들이 뭘데”) van Dijk의 정사각형이 작동하는 장면이며, 일상언어가 위기 국면에서 ‘뜨거운 민족주의’로 연결될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외세 위협과 안보 불안이 나타났다. 다수 댓글들이 중국·미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한반도 자체가 먹힌다”, “50년 내로 망한다” 같은 파국적 언어와 잡아먹힌다는 은유를 동원했다. 코펜하겐 학파의 관점에서 이는 특정 사안을 ‘존재적 위협’으로 선언하는 언표 행위이다. 청중이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문제는

‘정상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 ‘비상 안보’ 영역으로 격상할 수 있다. 이 때 강경론, 선제조치, 즉각 행동과 같은 해법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외부를 악마화하는 ‘타자부정’과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지금”과 같은 자기 효능의 과시(자기 긍정)가 나란히 제시되어 공포와 자신감이 함께 동원되었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 흐름은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상반된 계산 논리였다. 한 갈래의 담론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차피 들 돈이라면 우리가 주도권과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실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예컨대 “북한이 붕괴하면 누가 먹든 돈이 든다.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하자”는 식의 댓글은, 비용을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필요한 투자’로 재규정함으로써 통일을 일종의 성장 프로젝트로 상상한다. 이는 통일을 미래 성장 동력·마지막 기회로 제시해 온 발전주의 통일 담론의 언어 — 투자, 수익, 먹거리, 개발권 — 가 댓글 수준에서 재번역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갈래는 ‘막대한 비용’을 근거로 들어 즉각적인 통일 추진을 유보하거나 반대한다. “사회 통합의 진통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종전 전환만으로도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주장과, “2030은 효과 못 보고 세금만 낸다”는 세대 프레임이 대표적이다. 이 입장 역시 숫자·비용·사례 등 근거 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통일을 ‘손해 보는 투자’로 상상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 통일 담론이 전제한 성장·투자의 언어를 뒤집어 사용하는 셈이다. 두 입장은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통일을 기술과 재정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제화(economization) 전략을 취하며, 쟁점을 ‘누가 언제 얼마를 부담하고 무엇을 보상받는가’라는 분배 정의의 질문으로 수렴시켰다. 경제의 언어가 강해질수록 통일은 관리 가능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가치·

권리·정의, 북한 주민의 삶과 같은 문제는 배후로 밀려 날 위험이 커진다. 탈발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용 담론은 통일을 성장 프로젝트로만 상상해 온 발전주의 통일 담론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전제를 피로·냉소·거부의 정동으로 균열 내는 양가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 갈등과 내부의 적대 프레임이 통일 논의를 남북 관계 차원을 넘어 남한 내부의 ‘내전’ 서사로 바꾸었다. “종북/빨갱이/간첩” 같은 낙인 찍히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를 위협으로 구성하고, “킬링필드”, “수용소행”, “재산 몰수” 같은 역사적 공포의 키워드는 최악의 상상 가능성을 총동원했다. 이는 다시 안보화의 논리로 되돌아와 예외 조치—표현의 위축, 폭력의 정당화—를 정상화했다. 여기에 서도 반 다이크의 정사각형은 선명히 나타났다. 우리 체제(자유민주주의)를 신성화(자기 긍정 극대화)와, 상대 집단(좌파/화해세력)을 악마화(타자 부정 극대화)를 결합시켜, “적을 제거한 통일만 승인한다”는 조건부 태도를 낳았다. 탈안보화 관점에서 보면 쟁점은 다시 근거와 증거의 경쟁으로 되돌아와야 하지만, 댓글 공간에서는 공포·조롱·폭력 암시가 토론의 심의성을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커뮤니티별 차이

앞서 3장에서 언급한 플랫폼 구조와 하위문화의 차이는, 실제 댓글에서 감정의 방향, 합의 형성 방식, 적대의 표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우선 감정의 방향과 합의 형성에서 커뮤니티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쿠와 뽀뿌에서는 통일 찬성 정서가 거의 일방향적으로 나타났다. 이 커뮤니티의 댓글들은 “우리 땅이니 꺼져라”와 같은 국가 중심적인 표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맞장구치고 욕

설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분노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이로 인해 반대나 유보의 의견은 소수에 머물렀고, 논거를 교환하기보다는 구호에 가까운 표현들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에코 챔버(echo chamber)의 형태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에펨코리아와 루리웹은 찬반과 유보가 대체로 반반 수준으로 나타나 상호 반박과 대안 제시가 비교적 활발했다. 특히 루리웹에서는 “그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와 같은 부분적인 양보가 서로 오갔으며, 통계 자료나 역사적 사례를 요구하거나 제시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지만, 최소한의 근거 요구와 반증 가능성 인정, 부분 양보가 작동하는 상호 검증 규범 기반의 정동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는 공격적 표현과 조롱이 주를 이루어 합의 형성도, 생산적 논쟁도 어려운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발화는 자기 확신과 혐오를 나타내는 형태를 보였고, 반박은 논거의 교환보다는 상대를 비하하고 깎아 내리는 언어적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이로 인해 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감정적인 교착 상태로 수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적대의 표적도 커뮤니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더쿠와 뽀뿌 등 에코 챔버형 공간에서는 ‘외부의 적’(중국, 일본, 북한 정권)이 집중적으로 악마화되었다. 비하적 표현(“짱×”, “쪽××” 등)이 통일 논의의 전면에 나타나, 외부 세력을 향한 적개심과 통일 찬성 정서가 연결되면서 국수주의적 표현을 강화했다. 반면 디시인사이드와 일부 에펨코리아 댓글에서는 ‘내부의 적’을 지목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정 지역이나 국내 정치 집단에 대한 공격이 빈번하게 표출되어 지역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민 전체를 멸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부 표적화는 논의의 초점을 외교·안보·사회경제적 쟁점에서 정체

성의 충돌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아, 통일 담론을 남한 내부 이념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루리웹은 상대적으로 극단적 내부 타자화가 적었고, 내부와 외부 요인을 함께 언급하거나 적대적 어조 없이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플랫폼 하위문화와 이용자 구성의 차이가 적대의 표적과 강도를 조직하는 디지털 정동의 매개 구조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현 스타일과 밈 문화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냉소와 패러디, 인터넷 밈을 활용한 풍자가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디시인사이드의 한 이용자는 “통일되면 국가가 부동산 개발권 쳐 팔아먹을 생각에 싱글빙글 ㅋ”이라는 식의 밋글로, 정부가 통일을 돈벌이에 악용할 것이라는 의심을 유머 코드로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격렬한 담론 속에서 냉소적 거리두기와 자조적인 농담을 삽입하여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뽀뿌와 더쿠에서는 직설적 분노가 주를 이루었다. 뽀뿌의 경우 경제 토론이 잦은 커뮤니티 특성상 ‘비용 부담’, ‘효용’ 같은 이성적 어휘가 쓰였지만, 감정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조*시*’ 같은 거친 욕설로 귀결되곤 했다. 에펠큐리아는 남성 중심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여성 혐오적·성적 비하 표현이 일부 포착되었다.

근거 제시와 절차적 규범의 작동에도 차이는 분명했다. 루리웹에서는 통계나 역사 사례를 제시·요청하며 주장 간의 검증을 시도하는 밋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주장-반박-부분 양보를 가능하게 했으며, 최소한의 규범(근거 제시, 반증 가능성의 인정, 상대의 일부 타당성 승인)이 부분적으로 작동하여 논리적 논의의 모습을 띠었다. 반대로 더쿠와 뽀뿌에서는 정서적 동원에 기반한 의견 교환이 많이 나타났고, 디시인사이드는 인신공격과 조롱이 담론의 주를 이루

어 절차적 규범이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3) 시간대·강도에 따른 변이

댓글의 초기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과 분석에 중심을 둔 설명적인 어조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생활상을 다 알고 있다”거나 “통일하면 비용이 든다”와 같은 정보성 발언이 대표적으로 나타나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논거의 배열과 인용이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유지되어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담화의 양상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상반된 주장들이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강화되어, 모욕과 비하의 어조와 상호 인신공격성 발화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욕설과 명령형이 결합된 직접적 공격 수사가 자주 관찰되었고, 논거 자체보다 상대의 무지와 무능을 비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수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주장 간 상호 반박이 축적되어 분노 표출의 피드백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근후기로 갈수록 담화는 다시 한번 성격을 바꾸어 수사적인 질문과 냉소가 부각되었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냐?”와 같은 반문형, “그냥 따로 살자”와 체념과 피로가 섞인 코멘트가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초중반에 압도되거나 배제되었던 목소리가 뒤늦게 표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냥 이대로 안 싸우고 다른 나라로 지내자”처럼 통일을 하지 않는 대안을 시사하는 의견이 등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독성 강도에 따른 차이도 선명했다. 저독성(Low)으로 분류된 댓글은 대체적으로 논리적 진술이나 질문 형식을 띠었고, 수치·근거, 질문·탐색 범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돈

퍼주는데 비용 부담 안 시키겠냐?”와 같이 근거를 탐색하는 의문문 사례가 전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입장도 찬반의 이분법보다 조 건부·유보나 반대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신증론을 펴는 댓글 참여자들이 검증적 태도를 유지하고 점잖은 어투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독성(High) 댓글은 모욕과 명령형 어조가 대부분이었고, 절반가량이 “~ 꺼져”, “~ 개××”와 같이 직설적 모욕에 해당했다. 흥미로운 점은 고독성 댓글의 통일 입장이 순수 반대보다 강경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이다. “×돼지 병×들아, 한국은 통일 못하면 망한다”식의 문장처럼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앞세우면서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분의 언어가 감정적 강도를 증폭시키며 흑백논리화된 배제의 수사로 쉽게 수렴함을 드러낸다.

한편 중간 독성(Mid)은 두 극단의 단순한 중간치가 아니었다. 댓글에서 가장 높은 욕설 비율이 오히려 Mid에서 나타났다. 이는 고독성(High) 범주에는 숫자·근거형 논변에 욕설이 한두 개 섞인 이성적인 구도도 일부 포함된 반면, 중간 독성 범주는 양측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실전 공방의 형태를 지녀 날것의 언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간 독성 범주는 서로의 감정 자극과 응전이 강하게 표출된 국면의 언어적 지형을 반영한다.

시간과 강도의 상호작용을 교차해 보면, 중기 시간-중간 독성에서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후기-저독성에서 질문과 탐색 중심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댓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초기의 대립 구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대안적인 시각이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4) 수사 장치 × 의미 자원의 결합

수사 장치와 의미 자원의 결합은 배제, 안보화, 발전주의가 만나 서로를 증폭시키며 하나의 담화체계를 이루었다. 첫째, 모욕·비하(수사) + ‘정체성/주권’(의미 자원)과 만나 추방형 명령과 배제의 논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댓글은 “꺼져”, “나가”와 같은 명령어는 “우리 땅”, “우리 꺼”라는 영토 소유 프레임과 결합하며, 국제사회의 국가들을 ‘우리 영역에서 제거해야 할 침입자’로 구성하였다. 특히 ‘우리/여기(here)’의 강조는 국토·국민·국가를 동일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언표는 일상적 민족주의의 미시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질문·탐색(수사) + ‘정체성/주권’, ‘대외 변수’(의미 자원)가 결합하여 상대방의 권한과 계획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누구 맘대로 영토를 분할하나?”라는 반문은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분할하는 자격 자체를 질문 형식으로 반박했고, “어떻게 막을 건데?” 같은 문제제기형 문장은 상대 주장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부여했다. 이는 “그런 권한이 없다” 혹은 “방법이 없다”는 마음을 숨긴 채 내용을 전달하여 질문의 외형을 가진 논박과 조롱 전략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질문의 형태를 갖지만 사실상 특정 사안을 ‘존재적 위협’으로 호명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는 안보화의 언표 행위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폭력(수사) + ‘대외 변수’, ‘국내 정치’(의미 자원)와 결합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을 강하게 나타냈다. 예를 들어 “50년 내 망한다”, “킬링필드”와 같은 댓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세우며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싸울 수밖에 없다”, “모조리 제거” 같은 표현이 적을 상정하는 체제 위협과 연결되어, 통일 논쟁은 일상 정치

범주를 이탈하여 예외 상태의 안보 의제로 바뀌었다. 이는 댓글 참여자가 이 프레임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강경한 조치를 정당화하도록 유도하고, 전쟁불사형 같은 극단적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하였다.

넷째, 수치 근거 제시(수사) + ‘경제/비용’·‘대외 변수’(의미 자원)의 결합은 논쟁에서 핵심 도구로 기능했다. 이는 “5%”, “50년”, “몇 조 원” 같은 수치나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지금”, “GDP 몇 배 차이”와 같은 비교 사례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동일한 수치라도 작성자가 전제하는 관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같은 수치를 두고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쪽으로, 반대 측은 ‘이 정도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쪽으로 논리를 연결시켰다. 수치 제시의 주장에 객관성의 외형을 부여하여 감정적인 반박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선택을 은폐하여, 지표 선택 자체가 서로 다른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여기서 동원되는 지표들은 대개 GDP, 성장률, 재정 적자 규모 등 발전주의 통일 담론이 전제해 온 표준화된 성장 지표들이다. 발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계산 방식은 통일을 ‘관리 가능한 기술적 과제’이자 ‘투자 결정’으로 재구성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 권리, 정의, 관계적 평화 등 다른 기준을 주변화하는 경제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다섯째, 풍자와 인터넷 밈이 권력에 대한 불신과 냉소의 맥락에서 저독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나라는 통일 후 개발권 팔아먹을 생각에 싱글벙글”과 같은 댓글은 정부의 이해관계를 비꼬는 동시에, “ㄹㅇㅋㅋ”처럼 가벼운 반응 기호를 통해 과열된 논의로부터 긴장감을 낮추어 사안을 뒤로 물러나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댓글은 “항상 말

하지만 선택지 D가 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대안을 제시하며 “굳이 통일할 필요 없이 미·캐나다처럼 가면 된다”는 논지를 폈다. 이는 흑백구도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프레임으로 통일 담론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풍자와 대안의 결합의 맛글 수는 많지 않았고, 담화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5) 의미 범주/대상/수사/입장 조합 유형

첫째, ‘외부 위협에 맞서 통일 단행’ 유형이 나타났다. 의미 범주(안보/생존) + 공격 대상(외부) + 수사 전략(위기 부각과 명령형 촉구)이 결합하여 강경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한 사례는 안보/생존 프레임에 기초하여 외부 세력(중국 등)과 내부 집단을 ‘통일 방해 세력’으로 비난하고 외세에 대비한 통일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안보화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적 위협’으로 호명하는 말하기는 일반 정치의 규칙을 넘어서는 예외적 조치(긴급 대응, 강경 노선)를 정당화하며, 청중이 이를 수용할수록 강경 입장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나 미국 등의 외부 위협을 과장하거나 직접 지목하여 비난하고 공격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촉구를 덧붙이는 방식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둘째, ‘국토 수호를 위한 배제’ 유형이 나타났다. 의미 프레임(정체성/주권) + 공격 대상(외부) + 수사 전략(모욕·추방 명령)이 결합하여 배척적 태도가 강화되었다. 이는 집단 비하와 모욕적 표현을 결합하여 “우리 땅에 대한 타자의 관여는 절대 불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며 통일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해야 해서라기보다, 너희는 절대 안 된다”는 주권과 영토 권리 중심의 배타적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상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우리/우리 땅’ 같은 일상적 지시어와 상징이 은연중에 국가 정체성을 ‘계양’하며, 특정 사안이 연결될 때 배타적(뜨거운) 민족주의로 쉽게 점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체제 위협에 대한 공격적 대응’ 전형이 나타났다. 의미 프레임(체제 이념-자유민주 vs. 좌파/친북)+ 공격 대상(국내 집단)+ 수사 전략(폭력·처벌 호소)이 결합하여 강경 대결 또는 조건부 통일로 연결되었다. 댓글에서는 체제·안보 프레임 위에서 내부의 좌파를 표적으로 삼고 공포와 폭력 암시를 결합하여, 통일 담론을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식의 강경 대결 구도로 전환시켰다. 안보화 관점에서 내부 반대를 ‘존재적 위협’으로 부르면 정치적 반대가 안보의 문법으로 연결되어, 제거나 응징과 같은 예외 조치의 정당화가 쉬워진다. 특히 이 전환은 반공 담론과 결합할 때 강화되었다. “싸울 수밖에 없다”, “제거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과 “저들을 제거한 뒤에야 통일 가능”이라는 조건부 찬성이나 “저들과는 영원히 통합 불가”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용 부담에 따른 반대’ 전형이 나타났다. 의미 프레임(경제/비용·손익)+ 공격 대상(국내 집단)+ 수사 전략(과장과 조롱)이 결합하여, 현재 시점의 반대 또는 조건부 유보로 이어졌다. 특히 젊은 세대나 경제 관점의 댓글에서 두드러졌으며,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정부를 사실상 타자화하여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다. “효과는 없고 세금만 착취당한다”와 같은 과장·조롱은 “지금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사 장치로 작동했다. 이데올로기적 정서각형 기준으로 보면 자기 집단의 긍정보다 ‘우리 피해’의 강조가 강해, 통상적 ‘우리 긍정’ 대신 ‘우리 손해’ 프레임을 통해 반대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젊은 층 담론에서는 정부나 기성세대를 ‘그들’로 간주하여, 통상

적인 ‘우리(대한민국) 대 그들(외부)’ 구도를 ‘그들(국가/기성세대) 대 우리(현재 세대 납세자)’로 뒤집는 전환도 관찰되었다. 발전주의 통일 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형은 통일을 경제성장·투자 프로젝트로 상정하는 전제는 공유하되, 그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얻을 몫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집단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다섯째, ‘조건부 협력 또는 대안 모색’ 전형이 나타났다. 의미 프레임(문제 해결/대안) + 공격 대상(정형화된 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 + 수사 전략(수치·근거 제시)이 연결되어 통일에 대한 조건부 찬성이나 대안 제시로 연결되었다.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민주 정부를 세우면 통일이 아니어도 된다”, “남북이 미국-캐나다처럼 가자” 같은 제안들이 그 예다. 또한 북한 주민을 적이라기보다 협력 주체로, 평화공존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감정보다 논리와 사실(자료 인용, 비교 사례, 긴 설명)에 근거를 둔 모습을 보였다. 탈안보화 관점에서 이는 북한과 통일 이슈를 ‘존재적 위협’의 언어에서 일상 정치와 ‘협력’의 언어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표본 100개 중 일부에 그쳤고, 극단적 댓글에 묻히거나 “꿈같은 소리”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지만 통일에 대한 입장이 담론의 틀을 전환할 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다양한 담론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4) 정량·정성 결과의 통합 논의

첫째, ‘국내 정치’ 프레임은 정량·정성 차원에서 모두 가장 공격적인 담론 구성으로 나타났다. 프레임별 평균 독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국내 정치’ 프레임의 평균 독성은 0.353으로 다른 프레임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고(〈표 6〉), 모욕·비하 수사 전략 비율 역시 약 5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성 분석에서도 이 프레임은 “중북/빨갱이/간첩”과 같은 낙인, “킬링필드”, “수용소행”, “재산 몰수” 등 폭력과 박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는 통일 문제를 남북 관계나 국제정치 차원보다 남한 내부의 진영·세대 갈등으로 재배치하고, 상대 집단을 ‘제거나 응징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정사각형에 비추어 보면, ‘우리 체제/우리 진영’의 긍정과 상대 진영의 부정이 극대화되면서, 일상 정치의 경쟁이 안보·예외 상태의 언어로 치환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정량적으로 가장 낮은 독성(평균 0.168)과 조건부 찬성의 높은 비율(31.1%)을 보였으며(〈표 3〉, 〈표 6〉), 정성 분석에서도 연방제·연합제·과도정부·재정 분권 등 구체적인 모델·절차·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프레임의 땃글은 “연방제로 단계적 통합”, “과도정부 세워서 치안부터 정리해야”, “재정 분권 구조를 먼저 짜야 한다”처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비용·권리 구조로 할 것인가’를 묻는 언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을 ‘존재적 위협’의 문제에서 ‘통치와 관리’의 문제로 전환하는 탈안보화의 경로로 읽을 수 있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호명하기보다, 협상·타협·제도 설계의 상대(파트너 혹은 이해당사자)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욕·폭력 수사는 줄어들고, 수치·근거, 질문·탐색의 수사가 강화되었다.

셋째, 상위 세 프레임인 ‘경제/비용’(24.3%), ‘정체성/주권’(20.9%), ‘대외 변수’(25.7%)는 통일에 대한 상이한 입장·적대 대상·정서 구성을 만들어 내는 축으로 작동한다(〈표 2〉). ‘경제/비용’ 프레임은 반대 입장(43.0%)과 국내 집단, 북한 주민을 겨냥한 비판(각각 51.4%, 18.7%)

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했다(〈표 3〉, 〈표 4〉). 정성 분석에서도 “효과는 없고 세금만 낸다”, “2030은 이득 못 보고 세금만 뜯긴다”와 같은 서사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피로감·부담감·불신의 정동을 배경으로 통일을 ‘손익 계산에서 손해 보는 거래’로 상상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같은 비용·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어차피 돈은 든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통일 찬성으로 연결되는 댓글도 발견되었다. 탈발전주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비용 프레임은 발전주의 통일 담론(통일은 대박)을 부분적으로 재생산하면서도, 동시에 개발·투자 자체에 대한 거부·냉소의 정동을 키우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주권’ 프레임은 찬성 입장이 75.0%에 달하고, 외부 집단(69.6%)을 압도적으로 적대로 지목하는 특징을 보였다(〈표 3〉, 〈표 4〉). “북한은 원래 우리 영토”, “우리 땅에 끼어들지 마라”와 같은 댓글은 ‘우리/우리 땅’ 지시어, “여기/지금”의 국토 중심 시점을 통해 영토·민족·국가를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로 묶는다. 여기에 “꺼져라”, “누가 너희한테 권한을 줬냐”와 같은 추방 명령형이 결합하면, 통일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라기보다 ‘너희는 절대 안 된다’는 배타적 찬성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일상적 민족주의가 위기 국면에서 ‘뜨거운’ 민족주의로 비약하는 장면을 잘 보여준다.

‘대외 변수’ 프레임은 입장이 미상인 비율이 39.8%로 높고(〈표 3〉), 외부 집단을 거의 전적으로 적대 대상(92.0%)으로 설정한다(〈표 4〉). 질적으로는 “한반도 자체가 먹힌다”, “50년 내로 망한다”와 같은 파국적 언어 및 “싸울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위협 인식이 항상 통일 찬성으로 귀결되지는 않았고, “결국 어느 쪽이든 이용당할 뿐”이라는 체념·냉소와 결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

다. 다시 말해, ‘대외 변수’ 프레임은 안보화 이론이 말하는 존재적 위협 호명을 통해 정동의 강도를 끌어올리지만, 그 정동이 통일 찬성/반대 어느 한쪽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안·공포·냉소가 혼재된 상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시간·독성 패턴과 정성적 상호작용의 단계 전이를 종합해 보면, 댓글 담론은 대체로 정보 교환-감정 격화-반문·냉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저독성 구간에서는 수치·근거 제시와 질문·탐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간 독성 구간에서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집중되었으며, 후기·저독성 국면에서는 “그래서 결국 어떡하자는 거냐”와 같은 반문, “그냥 따로 살자”와 같은 체념·냉소가 늘어났다. 이는 정량적 수치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정동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며, 특정 프레임(특히 ‘국내 정치’와 ‘대외 변수’)이 중간 시점에서 대립을 극대화하는 반면, ‘통합/거버넌스’와 일부 대안 프레임이 후반부에 등장해 논쟁의 어조를 완화시키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의 반문형 발화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분석하여, 남한 사회의 북한 인식 지형과 온라인 통일 담론의 구조를 드러낸 혼합 연구다. 연구의 초점은 댓글 담론이 각 플랫폼의 규범·하위문화·정서 속에서 통일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에 있었다. 이를 위해 코드북(S/T/R/F)을 설계하고, 500개 댓글의 정량 코딩과 100

개 심층 표본의 질적 해석, Perspective API 보조지표를 결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미 프레임 분포는 ‘대외 변수’, ‘경제/비용’, ‘정체성/주권’이 상위 세 축을 이루어, 커뮤니티에서 통일 담론이 경제 계산, 영토/민족 주권, 국제구조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미 프레임과 통일 입장의 결합 양상은 ‘경제/비용’이 반대, ‘정체성/주권’이 찬성, ‘통합/거버넌스’가 조건부 지지와 강하게 결합했다($\chi^2=142.59, p<.001$). 수사 전략은 ‘국내 정치’에서 모욕·비하, ‘경제/비용’과 ‘인간/윤리’에서 수치·근거 제시, ‘정체성/주권’에서 권위 호소, ‘대외 변수’에서 풍자·밈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chi^2=89.74, p<.001$). 독성은 프레임별 차이가 유의미했고($F=4.873, p<.001$), 평균치가 ‘국내 정치’에서 가장 높고(0.353), ‘통합/거버넌스’에서 가장 낮았다(0.168). 질적 분석에서는 ① 영토/배타적 정체성, ② 외세 위협과 안보화, ③ 비용 논리의 양방향 작동, ④ 이념 내전의 격화라는 반복 테마와, 추방 명령형 + ‘우리 땅’ 프레임, 종말론/폭력 암시 + 대외/국내 정치 프레임 등의 결합 전형이 나타났다. 시간 흐름은 대체로 초기(사실, 정보, 근거 제시) → 중반(감정 격화) → 후기(반문·냉소)로 이동했고, 커뮤니티별로는 더쿠/뽀뿌의 에코 챔버, FM코리아/루리웹의 부분적 토론, DC의 공격성 과다라는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통일 담론이 민족 정체성, 안보, 발전 상상력, 통합 거버넌스라는 네 층위의 틀 위에서 조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우리 땅’ 지시어와 추방 명령형이 결합한 댓글들은 일상적 국기 게양이 위기 국면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로 비약하는 장면을 드러내고, 외세 개입과 체제 위협을 전면화하는 ‘대외 변수’·‘국내 정치’ 프레임은 존재적 위협을 호출하는 안보화 담론이 댓글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경제/비용’ 프레임은 통일을 투자 가능

한 성장 프로젝트이자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동시에 상상하게 만드는 양가성을 드러내며,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은 이러한 민족·안보·발전의 문법을 상대적으로 우회해 통일을 모델·절차·제도의 설계 문제로 재구성함으로써 맺글 공간의 독성을 완충하는 탈안보화의 경로를 제시한다.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담론에서 안보화의 강화를 완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대외 변수’와 ‘정체성/주권’ 프레임이 결합하면 반문형 발화가 곧장 존재적 위험 호명 → 동원 촉구로 비약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한 담론을 위험 진단보다 실행 설계(모델·절차·재원·분권·치안·사법)를 먼저 제시하는 ‘통합/거버넌스 프레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비용, 정체성/주권의 ‘엇갈린 당위’에 대한 이중 경로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비용’ 프레임은 반대·유보를, ‘정체성/주권’ 프레임은 찬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통일정책은 재정·분배의 명료한 로드맵(세대·지역별 순이익·이행비용의 가시화)과 헌법·영토·주권의 정합성 근거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에 프레임 인식 훈련과 탈안보화 문해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우리/여기/지금’ 지시어가 일상적 국기 게양(flagging)으로 작동하며 경계를 짓고, 추방에 관련된 내용을 유발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통일교육에서 동일 사건을 여러 프레임으로 재서술하고, 반문형 발화의 ‘전제’를 분해하여 ‘대안 프레임(거버넌스·인권·공존)’ 재구성 훈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 상위 5개 커뮤니티·최근 1년이라는 표본·기간의 제약, ㉡ 단일 자극 문장에 대한 반응이라는 연구 맥락, ㉢ 작성자 사회인구학 정보 부재, ㉣ Perspective API의 보조지표 한계(한국어 욕

설·밈 탐지, 절단값), © 합의 코딩에도 불가피한 해석자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과·일반화 주장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학문적 위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통일 연구의 분석 대상을 온라인 댓글이라는 매체 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통일 연구와 뉴미디어·디지털 정동 연구의 교차점에 놓인다. 통일 정책 대안 자체보다 플랫폼 구조와 커뮤니티 문화, 자극 발화가 의미 프레임·입장·독성의 결합 규칙을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여론조사 중심 연구를 보완하는 미시 담론 분석으로 자리매김한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되, 미사일 발사·군사적 긴장·정상회담 등 사건 기반 자료를 활용해 외생적 충격이 프레임·독성·입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정체성/주권’·‘경제/비용’·‘통합/거버넌스’ 프레임 노출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며, 댓글 담론이 언론·정치 담론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투고: 2025.10.31. / 수정: 2025.12.02. / 채택: 2025.12.07.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논문

김한민·김기문, “온라인 게시판에서 익명성과 악성댓글 사이의 관계 연구: 합리화와 도덕성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6호(2018), 1095~1115쪽.

2) 기타 자료

더쿠 댓글, <https://theqoo.net/square/3323608826>(검색일: 2025년 10월 31일).

디시인사이드 댓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27927>
(검색일: 2025년 10월 31일).

루리웹 댓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626961>(검색일: 2025년 10월 31일).

뽀뿌 댓글,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582521&ismobile>(검색일: 2025년 10월 31일).

fm코리아 댓글,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best&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7027710221&search_keyword=%ED%86%B5%EC%9D%BC&page=4&listStyle=webzin(검색일: 2025년 10월 31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Billig, Michael, *Banal Nationalism*(London: SAGE, 1995).

Buzan, Barry,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Escobar, Arturo,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reissue with new preface)(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Latham, Michael E., *The Right Kind of Revolutio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 McMichael, Philip,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6th ed.(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16).
- Rist, Gilbert, *The History of Development: From Western Origins to Global Faith*, 5th ed.(London: Zed Books/Bloomsbury, 2019).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 Bert Klanderman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1 (Greenwich: JAI Press, 2000).
- Sunstein, Cass R.,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van Dijck, José, *The Culture of Connectivity: A Critical History of Social Me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van Dijk, Teun A., *Discourse and Context: A Sociocognitive Approac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 논문

- Colleoni, Elanor, Alessandro Rozza, and Adam Arvidsson, "Echo Chamber or Public Sphere? Predicting Political Orientation and Measuring Political Homophily in Twitter Using Big Data,"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4, No.2(2014), pp.317~332.
- Gillespie, Tarleton, "The Politics of 'Platforms'," *New Media & Society*, Vol.12, No.3(2010), pp.347~364.
- Papacharissi, Zizi, "Affective Publics and Structures of Storytelling: Sentiment, Events and Medial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19, No.3(2016), pp.307~324.
- Suler, John,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7, No.3(2004), pp.321~326.

South Korean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the Structure of Online Unification Discourse

An Analysis of Community Comments on the Utterance, “You say you don’t want unification, so are you going to hand North Korea over to China or some other country?”

Jang, Dongk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South Korean online communities respond to the rhetorical question, “You say you don’t want unification, so are you going to hand North Korea over to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n order to map perceptions of North Korea and the structure of online unification discourse. We conduct a mixed-methods analysis of 500 comments from DCInside, FMKorea, Theqoo, PPOMPPU, and Ruliweb, combining codebook-based coding of meaning frames, stances, targets, and rhetorical strategies with Perspective API toxicity scores, cross-tabulations, chi-square tests, Welch ANOVA,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a 100-comment subsample. Results show three dominant frames — external variables, economy/cost, and identity/sovereignty — each systematically linked to pro-con positions, targets of attack, and rhetorical styles. Toxicity peaks in the domestic-politics frame and is

lowest in the integration/governance frame, indicating that design-oriented language buffers antagonism. Qualitative analysis further reveals everyday securitization through possessive “our/our land” plus expulsion imperatives, the ambivalent role of cost discourse, affective shifts from information exchange to escalation and cynicism, and community-specific echo chambers. Overall, online unification discourse is organized by a development-nation-security grammar, while governance- and desecuritization-oriented frames suggest potential pathways for reducing toxicity in digital public spheres.

Keywords: perceptions of North Korea, unification discourse, online communities, meaning frames, securitization